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4.05.(제3호)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관련 분야 연구 실적]

서울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방안(2022)

[수탁] 서울시 학대 예방·피해 지원체계 현황분석과 정책과제(2022)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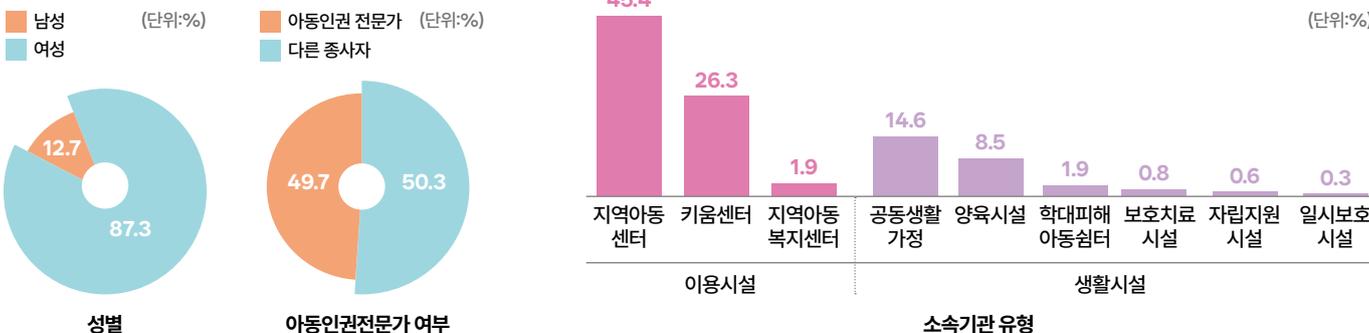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에 미치는 요인 탐색(2020)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인권보호체계 내실화방안-아동인권선임교사제도를 중심으로(2020)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종합 계획」에 이어 2021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통해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정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인권전문가’를 지정하여 상시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서울특별시, 2019<sup>1)</sup>; 서울특별시, 2021<sup>2)</sup>). 아동인권전문가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체계 확립과 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및 아동과의 소통 강화,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인권증진, 학대 의심 징후 아동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아동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지정 기관을 확대하고, 전문가 수 또한 108명에서 2022년 12월 기준 763명까지 늘려 왔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관련 교육 실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아동인권전문가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제도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아동인권전문가 제도가 아동학대 피해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일상적 체계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실태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24명(아동인권전문가 314명, 다른 종사자 310명)
-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 조사 기간: 2023년 3월 23일~4월 7일



\* 본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2023년에 수행한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류임량·한정혜, 2023)의 연구결과를 일부 요약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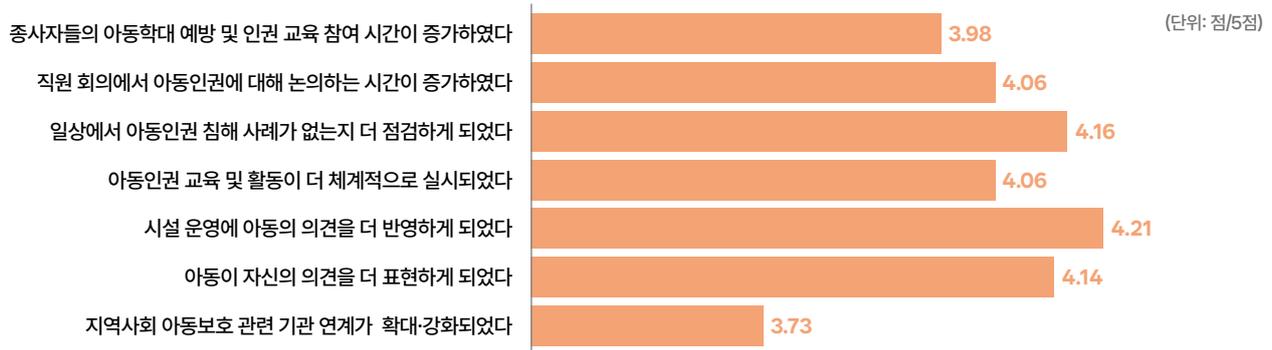
1) 서울특별시(2019),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 종합 계획」.

2) 서울특별시(2021),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도입과 활동 현황

### ○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와 아동친화적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내 전담인력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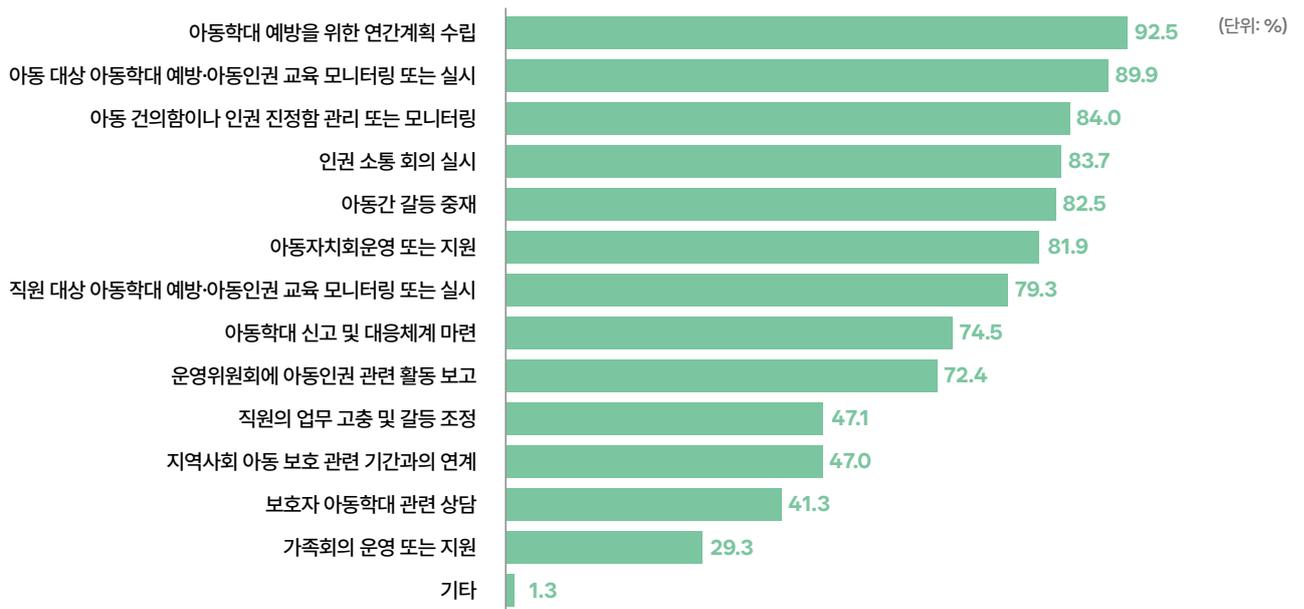
- 2022년 12월말 기준 아동복지시설 796개소 중 763개소에 아동인권전문가가 각 1명씩 지정되어 있으며(서울시 내부자료, 2022)<sup>3)</sup>, 아동복지시설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전담인력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제도 도입으로 기관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함
  - '시설 운영에 아동의 의견을 더 반영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4.21점(5점 만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아동 의견 반영과 아동 의사표현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남



|그림 1|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도입 후 기관의 변화 인식

###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현황

- 아동인권전문가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①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체계 확립, ② 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과 아동과 소통 강화, ③ 아동학대 의심징후 발견 시 신속한 대응과 신고가 포함됨(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2)<sup>4)</sup>
- 아동인권전문가의 활동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간계획 수립' 92.5%, '아동대상 아동학대예방·아동인권교육 모니터링 또는 실시' 89.9% 등으로 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음. 다만 아동인권전문가의 역할로 가이드북에 명시된 활동이 모든 기관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아래 항목별 응답률을 통해 확인됨



|그림 2| 아동인권전문가의 활동

3) 서울특별시 내부자료(2022), 「25개 자치구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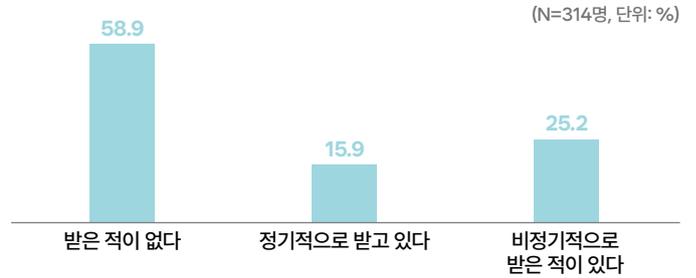
4)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2),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를 위한 가이드북」.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 아동인권 전문가 가이드북에는 활동 보고 빈도를 분기별 1회로 권고하나 45.5%가 분기별 1회 보고를 실시하였음. 월 1회 보고 비율은 28.7%, 연 1회 비율은 11.1%로 보고 빈도에서 격차를 보임
- 활동 보고 피드백을 받았다는 응답은 41.1%였고, 정기적 피드백을 받는 경우는 15.9%로 응답률이 더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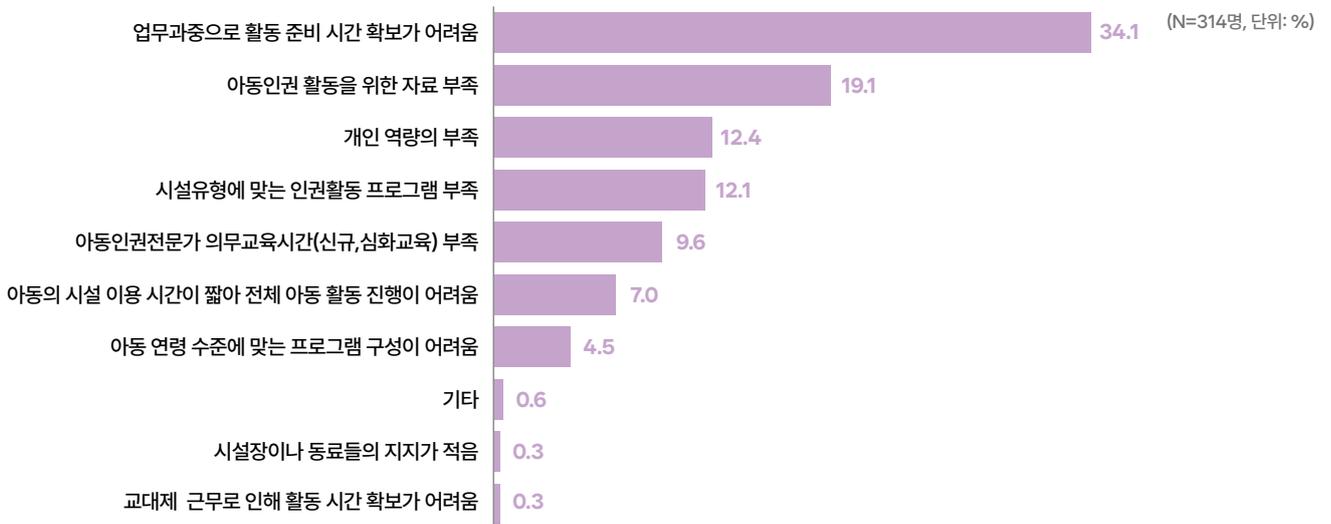
|그림3|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보고 빈도



|그림4| 활동 보고 피드백 여부

###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의 어려움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의 어려움 1순위 응답은 '업무과중으로 활동 준비 시간 확보가 어려움'이 34.1%로 가장 많았고, '아동인권 활동을 위한 자료 부족'은 19.1% 순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 아동연령별 맞춤 자료의 부족으로 아동인권전문가들에게 자료 준비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은 활동 자료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5|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의 어려움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개선 및 지원 요구

###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의 전문성 강화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내실화를 위해 자격 기준 보완 의견이 제시됨. 현재 자격 기준은 아동돌봄 등 직접서비스 제공시설 종사자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해당 시설 근무경력 1년 이상, 아동인권전문가 교육 이수(예정)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현행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4.3%로, '인권 교육 수강이나 자격증 기준 추가'가 42.9%로 가장 많았고, '돌봄기관 경력이나 근속경력 기준 강화'가 11.9% '인권 관련 활동 경력 추가'가 9.5%로 나타남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그림6 | 아동인권전문가 자격 기준 보완 사항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종사자 대상 교육 개선이 요구됨.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아동복지시설에 특화된 교육 부재’를 응답한 비율이 28.5%로 가장 높았고, ‘많은 교육 내용이 차별화되지 않고 유사’(27.4%), ‘사례 중심의 교육 부족’(21.3%)을 선택한 경우도 적지 않았음



그림7 |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인권 교육의 개선 요구

- 생활시설 종사자의 38.2%, 이용시설 종사자의 26.6%가 아동인권전문가의 역량 강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용시설의 경우 ‘아동인권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교구 보급 확대’를 응답한 비율도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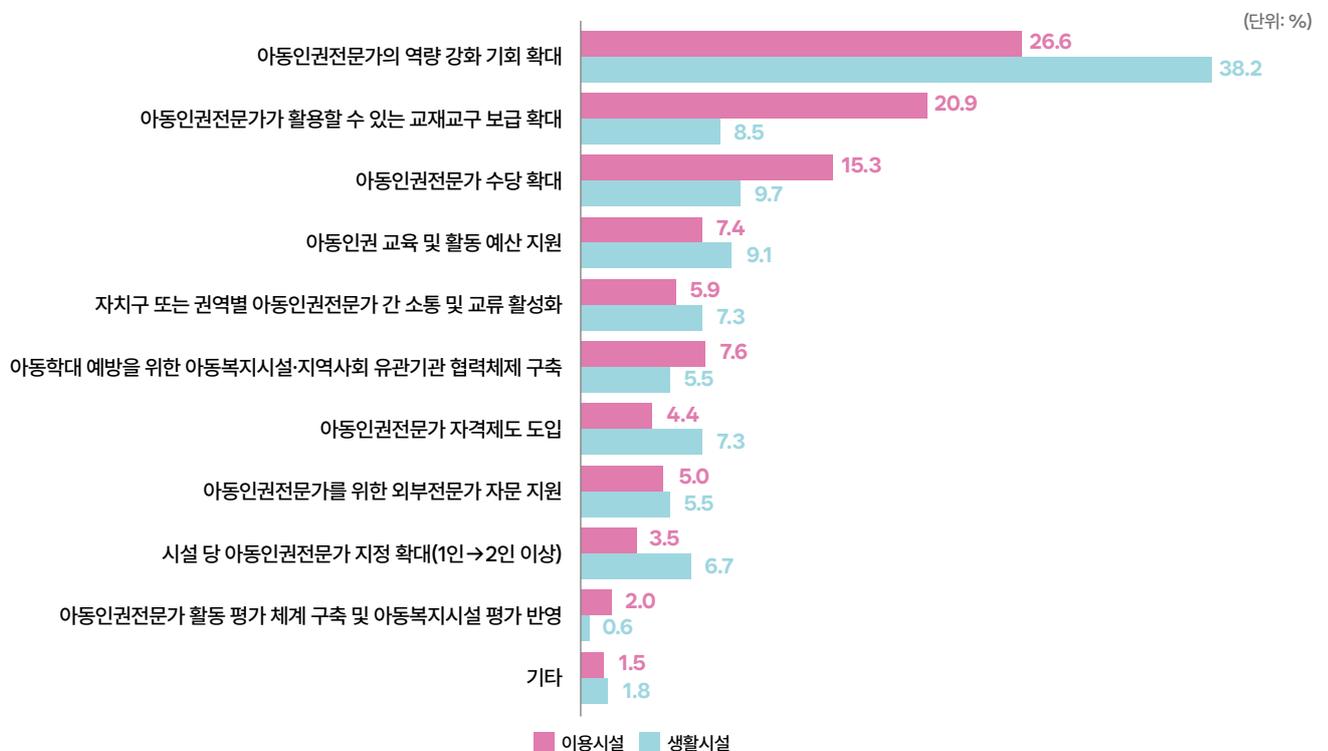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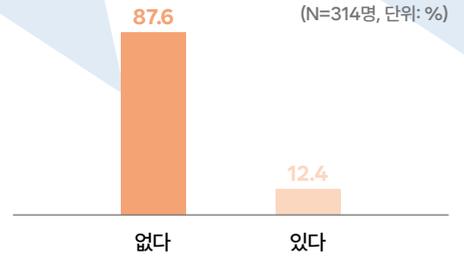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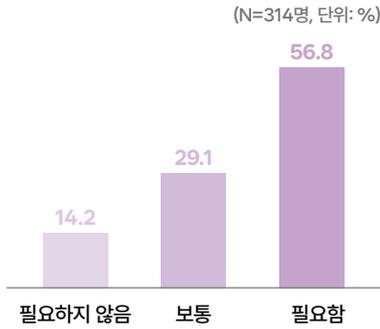
그림8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 사항

##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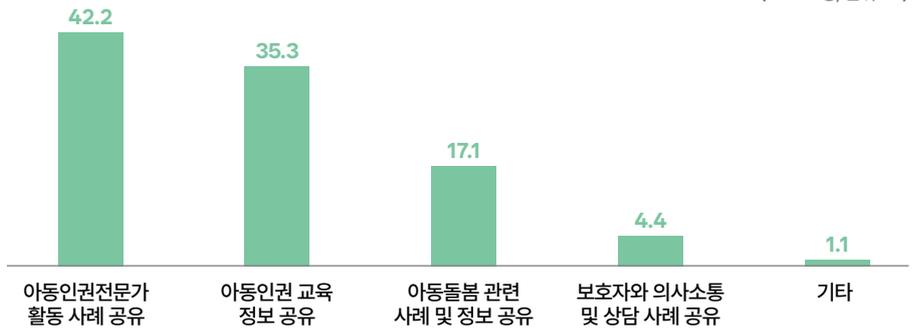
- 아동인권전문가의 87.6%가 아동인권전문가 네트워크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네트워크 필요성에 대해서는 56.8%가 동의하여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사례나 아동인권 교육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하였음



|그림9| 아동인권전문가 네트워크 여부 (N=314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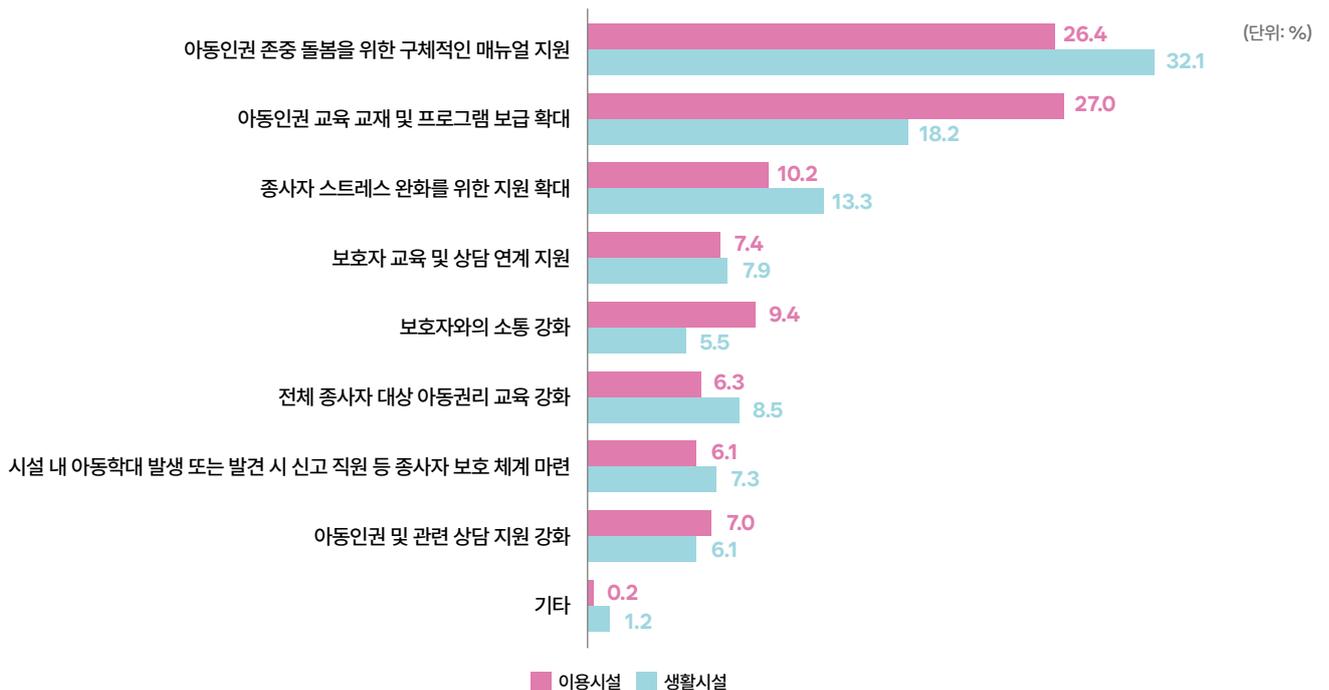
|그림10| 네트워크 필요성 (N=314명, 단위: %)



|그림11|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로 하는 지원 (N=314명, 단위: %)

###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동인권 존중 돌봄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지원'과 '아동인권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1순위 응답이 달랐는데,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인권 존중 돌봄 지원을 더 필요로 한 반면, 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아동인권 교육 지원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이는 종사자 지원이 시설유형별로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12|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개선 과제

### ○ 아동인권전문가 제도 운영 체계 개선 필요

- (아동인권전문가 역할 강화) 장기적으로 아동인권전문가에게 아동학대 예방만이 아니라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연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추어 아동인권 관련 활동을 진행해야 함. 또한 아동과의 소통 확대, 아동의 인권 인식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활동 모니터링 체계 강화) 아동인권전문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피드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단기 과제로는 아동인권전문가의 자기기입식 체크리스트 도입, 장기과제로는 교육기관 컨설팅 또는 외부 평가를 제안함

표1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모니터링 체계(안)

구분	모니터링 주체	형식	실시 빈도	내용
단기과제	아동인권전문가	자기기입식	분기별 1회	-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작성 후 보고함 -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개별 모니터링이나 컨설팅을 실시함
중장기과제	교육기관	컨설팅	연 1회	- 전문가가 기관으로 방문하여 활동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점을 기관 맞춤형으로 제안함 -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자치구의 시설 점검 의뢰 및 개선 후 추가 컨설팅을 실시함
	자치구 또는 외부 전문가	외부 평가	분기별 1회 또는 연 1회	- 자치구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관을 방문하여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함 -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등 성과를 확산함

### ○ 아동인권전문가 역량 강화 지원 다각화

- 아동인권전문가 역량 강화가 제도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욕구로 나타난 만큼, 아동인권전문가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시설유형별로 차별화된 교육이 개발되어야 함
- 아동인권전문가 네트워크는 당사자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할 때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자치구별 아동인권전문가 네트워크나 자발적인 아동인권전문가 학습공동체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지원 확대

-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인권 매뉴얼 및 아동인권전문가 활동 교재교구 개발·보급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확대도 시설 내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함.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참여자도 시설의 일시 인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함
- 장기적으로 “아동인권전문가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자격증 도입을 위해서는 단계적 교육을 마련하고 이를 수료한 경우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함